

MZ세대 노조 만난 고용장관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필요”

이정식 장관 ‘MZ세대 노조 간담회’
“경제사회 전반 산업환경 큰 변화
노동법제·관행, 변화없이 경직적”

한국노총 “노동시장 제도 개악에
MZ노조 들려리 세우기 중단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1982~2012년생인 MZ세대 직장인들을 만나 경직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부가 임금·근로 시간 제도 개선에 명분을 쌓기 위해 “MZ노조를 들려리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MZ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

다양한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MZ세대가 사용하는 블라인드앱에는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경력만 쌓으면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등의 하소연이 올라와 많은 공

감대를 얻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제와 관행은 변화하지 않는 경직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 개

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 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확대하는 방식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민주노총 화섬노조 LIG넥스원 사무연구직지회,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의 MZ세대 노조 간부와 조합원 9명이 참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MZ세대 노조와의 간담회는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심된다”며 “노동시장 제도 개악에 MZ노조를 들려리 세우는 책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MZ세대 노조의 경우 기존 생산 기능적 중심 노조의 단체협약을 비판한 노조들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 결을 같이한다”며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 중심 노조로 직군도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어려운 시기, 자발적인 상생노력 절실”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3사 만나
“배달앱, 음식점·소비자에 돌파구
거래관행 자율적 개선 지원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입점업체 점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히”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인근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軍, 전력지원체계 홍보 아닌 세계 우수사례 배워야

육군, KAIF서 마일즈 체계 등 소개

최저입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특수 작전용칼 등 중국제 불법복제품이 군납에 판을 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사업은 국제시장에 뒤쳐져 부실과 불신의 뉘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육군은 22일 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인다.

육군에 따르면 22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가 열리고 있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한·아세안+국제 군수 포럼(KAIF)’이 개최된다. 육군이 주도하는 KAIF는 아세

안 주요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등 13개 국가(주요직위자 36명)가 참가한다.

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우수성 홍보와 함께 군수 분야 협력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인 만큼, 군 일각에서는 국군보다 개인전투 장구류 개선이 늦었지만 현대화를 잘 이룬 튜르키예 육군과 미군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전력지원체계를 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호주군의 사례를 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8개국을 초청해 시작된 KAIF는 한국 육군 주도로 아세안 국기를 비롯한 회원국들과 군수 분야 협력을 통해

다자간 보합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군수 협의체다. 올해 포럼은 DX Korea 2022와 연계해 국내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소개하여 군수품 수출 증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수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는게 육군의 설명

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가 입찰로 부실한 전력지원체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군납시스템, 미국 및 유럽국가의 신뢰성, 중국의 저 가입박 등으로 국내 전력지원체계 관련

업체들은 공장 등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환경부, 온실가스 저감방안 제시해야

오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도로·

공항건설 같은 국가 개발사업 전에 ‘기

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

평가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으로 처음 도입됐고,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국가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10개 사업대상은 ▲에너지개발 ▲산

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

자원개발 ▲항만건설 ▲신지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여기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년 뒤인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게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